

화성시, 사각지대 없는 복지망 통해 복지특례시 조성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입력 2024.11.27. 오후 1:30



화성시가 촘촘한 복지망을 조성하는 등 복지특례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화성시의 복지사업과 관련해 설명 중인 정명근 시장.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특례시 출범에 맞춰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시민복지 확충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특례시 화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해 꼼꼼한 시민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희망화성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 AI 복지 도시 화성, 사각지대 ‘ZERO’

화성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는 2019년 5월 경기도 최초로 홀몸노인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

화성지역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는 고립 가구와 고독사 위험 가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AI 스피커를 통한 말벗, 뉴스 등 콘텐츠 제공과 출입 감지, 응급상황 발생 시 관제 센터 연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올해부터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AI 노인 말벗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안부전화 서비스를 시행, 3회 이상 수신하지 않는 경우 담당 직원 방문 등 선제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인공지능 통화 시 ‘살기 어렵다’ 등 위기 징후를 감지해 전화상담을 비롯한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6월부터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해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로봇을 활용한 식생활, 복약 관리, 정서 지원, 위급상황 시 관제센터 연결 등 24시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 및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 노인 대상 건강관리 복지도 실천하고 있다.

이어 시는 은둔·고립 위기 청년·청소년을 위한 복지에도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시는 은둔·고립 위기를 겪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된 시는 내년 상반기 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고립 청년·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화성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진행된 누구나 돌봄 사업 업무협약식 모습. 화성시 제공

■ 시민 참여로 서로 돕는 화성 '복지특레시'

시는 시민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복지 지원 정책을 실시해 기부 선순환 모범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7월 취임한 정명근 시장은 당시 자살예방 핫라인을 결재 1호로 채택하며 시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시는 핫라인 가동과 함께 고위험 위기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만건이 넘는 대상자 가운데 상담을 제외한 실질 지원 비중이 7.5%에 불과한 점을 파악했다.

또 실질 지원 대상자 중 공적 급여로 연계된 건이 2%인 212건인 점을 확인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에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희망화성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 기부 후원금을 통해 시민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사례 홍보를 통해 참여형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시민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사업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가구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생계비 183만3천500원(4인 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항암 치료비 최대 100만원 ▲치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간병비 최대 300만원(60일 한도) 등이다.

현재까지 1천36명이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혜택을 지원 받았으며 시는 기본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75%에서 120%까지 넓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화성시복지재단,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화성시 파트너스 어워즈 등 기부자 예우 및 캠페인을 진행해 나눔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주도형 복지정책을 통한 나눔 일상화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지난 6월 열린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개소식. 화성시 제공

■ 시민 경제 자립을 돕는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시는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과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서민층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추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으로 지난 4월 개소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센터는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을 비롯해 채무 조정, 불법 추심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채무 조정 상담을 통해 악성 채무 해결, 파산, 회생, 신용 회복 등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채무 문제를 겪는 시민들의 실질적 자립을 돕고 있다.

또 타 센터와 달리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결과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의 상호 연계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매주 사례 회의를 열어 고난도 사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적극적 사례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소한 센터는 10월까지 총 612건의 상담을 진행해 채무 문제를 겪는 시민들의 자립을 도왔다.

또 내담자 심리 안정을 위한 법원 동반 서비스, 의료, 주거 등 자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재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시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센터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회생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센터 홍보 강화와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AI를 활용한 상담 환경 등을 조성해 화성시를 대한민국 최고 복지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며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57935>